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3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20선

현장중심의 농식품 규제혁신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현장중심의 농식품 규제혁신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01 노후불량주택개량비용 지원단가 현실화 04

02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대 06

03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완화 08

04 비의도적 사유로 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완화 10

05 가루쌀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의 판매종료시점 연장 등 완화 12

06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 종류 확대 14

07 국가식품클러스터 OEM 생산품의 혼합 판매 및 음료제품 판매 허용 16

08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선 18

09 매립지(간척지) 등 매각대금 납부 시 분할납부 허용 20

10 매립지(간척지) 등 임대 시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개선 22

11 국내가공품과 수입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통일 24

12 농산물이력추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 26

13 소면적 재배작물(엽채류, 허브류 등)에 사용하는 농약 직권등록 확대 28

14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30

15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의무종자 유예사유 인정범위 확대 32

16 농작물재해보험 재정식·재파종 특약 신설 34

1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기준 완화 36

18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 한도 상향 38

19 공동체 텃밭 운영규모 기준 완화 40

2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개선 42

농촌의 낡은 주택을 고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늘렸어요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개량 사업은 30가구 이상 거주하면서 노후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40%를 넘는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보급 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여파로 건설용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재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나 집수리 등에 필요한 주택정비 단가도 급등하면서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아예 개량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시장의 동향에 따라 사업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정비 분야의 지원단가를 상향해서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 기간에 부진했던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노후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었어요"

개선전 슬레이트 지붕개량 9백만 원, 집수리 8백만 원으로 주택정비 지원단가 제한

개선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1천1백만 원, 집수리 1천만 원으로 주택정비 지원단가 상향

농촌의 아파트 거주자도 단독주택 신축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업인은 물론 농촌의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촌의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농촌의 공동주택거주자에게까지 확대해서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이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도시지역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농촌 주민에 대한 역차별적 조건을 없애고 농촌 주민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도 지원받으세요"

개선전 농촌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농촌 읍·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지원 불가

개선후 농촌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에 포함

밤·잣 임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을 낮췄어요

정부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밤의 경지면적은 5천㎡, 잣은 1만㎡ 이상이 되어야만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준면적이 1천㎡인 대추, 호두, 도토리 등 기타 수실류와는 다른 것으로 밤 또는 잣을 경작하는 임업인들에게 불리한 요건이었습니다. 이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나무와 잣나무의 면적 기준을 다른 수실류와 같이 1천㎡로 낮춰, 밤나무와 잣나무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등록을 수월하게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0.5ha 이하의 소규모 산지는 소규모임가직불금을 통해 임가 당 연 120만 원, 최소 0.1ha에서 최대 30ha 산지는 면적직불제를 통해 ha당 연간 70~94만 원이 지급되면서, 매년 55억 원을 웃도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밤·잣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신청이 쉬워졌어요"

개선전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이 다른 수실류 보다 높았던 밤과 잣

개선후 다른 수실류와 같은 1천㎡로 밤과 잣의 발급 기준면적 완화

고의성이 없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지 않아요

친환경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단순처리·가공하는 자(이하 '취급자')는 최종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도록 원재료와 가공과정을 모두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취급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3년 동안 3회 이상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으면 원재료의 문제라 하더라도 취급자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바람에 의한 비산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선량한 취급자의 인증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고 여러 품목의 인증품을 많이 사용 할수록 인증취소 가능성도 높아 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재료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하고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억울하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했어요"

개선전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인증취소 가능

* 1·2차 위반 시 시정조치,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개선후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조치 처분

*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 인증취소 처분은 유지

가루쌀의 재해보험 가입과 보험금 신청이 쉬워졌어요

과잉생산되는 쌀의 수량을 조절하고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가루쌀 재배를 적극 장려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재배농가는 일반벼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서 태풍·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이앙하는 일반벼와 달리, 6월 하순이 이앙 적기인 가루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가루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식물체 65% 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했던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조건을 60% 이상으로, 제현율(벼에서 현미 생산량 백분율) 65% 미만일 때 지급하던 수확불능 지급조건은 70%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루쌀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수월해지고 안정적인 가루쌀 농업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루쌀에 꼭 맞춘 재해보험 덕분에 더욱 든든해졌어요"

개선전 가루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후 가루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 연장 및 지급기준 완화

동애등에와 벼메뚜기도 가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축산법은 소·말·돼지 등의 사육동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동물'에는 관상용 조류 15종, 곤충 14종, 짐승과 기타 각 1종이 포함됐습니다. 이중 곤충 14종은 2019년에 고시개정을 통해 가축에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은 식용 또는 학습용으로 사료용 곤충은 갈색거저리 유충(밀웜)과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2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식용과 사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곤충을 식량자원으로 간주해서 가축으로 지정한 EU와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동애등에와 벼메뚜기도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를 소비하는 자원순환형 익충인 동애등에와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인 벼메뚜기를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한 혜택을 넓히고 국내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곤충도 가축으로 등록하고 축산농가로서의 혜택을 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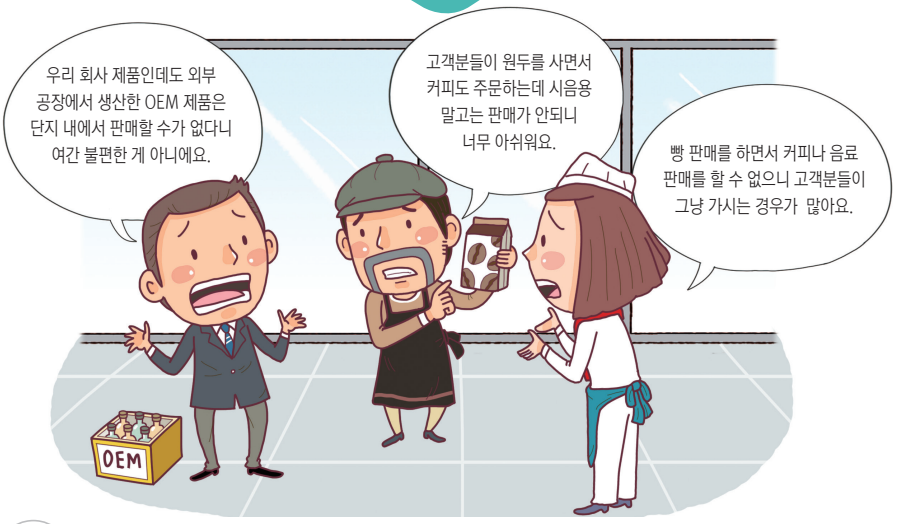
개선전 가축에 포함하는 곤충을 14종으로 제한

개선후 동애등에와 벼메뚜기도 가축으로 추가 인정

단지 내 공장에서 OEM 제품이나 음료를 판매할 수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OEM 생산제품은 산업단지 밖에 별도로 매장을 마련하여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OEM 제품과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시음 외에는 유료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커피 생산기업이나 제과 생산기업도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할 수 없어 다양한 시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OEM 제조 조건을 충족할 때는 OEM 생산제품도 단지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여 비알콜 음료 판매도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추가 비용을 줄이고 방문객들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지 내 판매 규정 완화로 비용은 절감하고 편의성은 높아졌어요"



개선전 단지 외 공장 OEM 제품은 판매 불가, 단지 내 음료 유료 판매 불가

개선후 단지 외 공장 OEM 제품도 단지 내 판매 가능, 단지 내 비알콜 음료 판매 가능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어요

가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고 방역기준을 준수한 농가에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자율방역을 장려하기 위해 방역기준을 준수하였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방을 위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는 높은 시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상금의 감액과 감액의 경감을 합쳐도 최소 2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제안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역학조사로 방역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으로 높은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때 가축평가액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처분 후 경영안정을 앞당기도록 지원합니다.

"방역에 힘쓴 만큼 보상해 드려요"

개선전 보상금 지급기준에 방역기준을 준수한 농가에 대한 지원 미흡, 위반사항이 많으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농가도 발생

개선후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는 유리한 시세 기준 적용, 방역 우수농가는 보상금 감액 10% 경감, 가축평가액 최소 20% 지급

매립지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매립지등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제공되지 않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한 매각대상 자격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습니다. 이때 농지 이외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시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 자격자는 매각대금 일시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액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없어졌어요"

개선전 매립지등 매각대금 중 농지 이외의 금액은 전액 일시납부

개선후 매립지등 매각대금 중 농지 이외의 금액도 분할납부 가능

매립지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대상을 확대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매립지등의 임대료는 계약일 9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는 매립지를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또는 '농지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나 농업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한 임대료 납부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존과 같이 90일 이내 전액을 납부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나 농업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서도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자나 교육훈련사업자도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개선전 매립지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가능 대상을 제한

개선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와 농업교육훈련사업자도 매립지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가능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통일했어요!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표기로 통일됩니다.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모두 10포인트로 표기하는데 반해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지 표면적에 따라 8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 모두 포장 면적과 상관없이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련 농식품 가공업체(자)의 관리부담을 줄이고 비의도적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이 같아지면서 혼란이 줄었어요"

개선전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작성

개선후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통일

스마트폰으로도 농산물 이력추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는 농산물 이력추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력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휴대전화 등으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여전히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직접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농산물의 이력정보를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생산자의 주소, 품목, 생산량 등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높아진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유통·판매자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이력추적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개선전 모바일 기기로 농산물 이력정보 확인 불가능

개선후 모바일 기기로 농산물 이력정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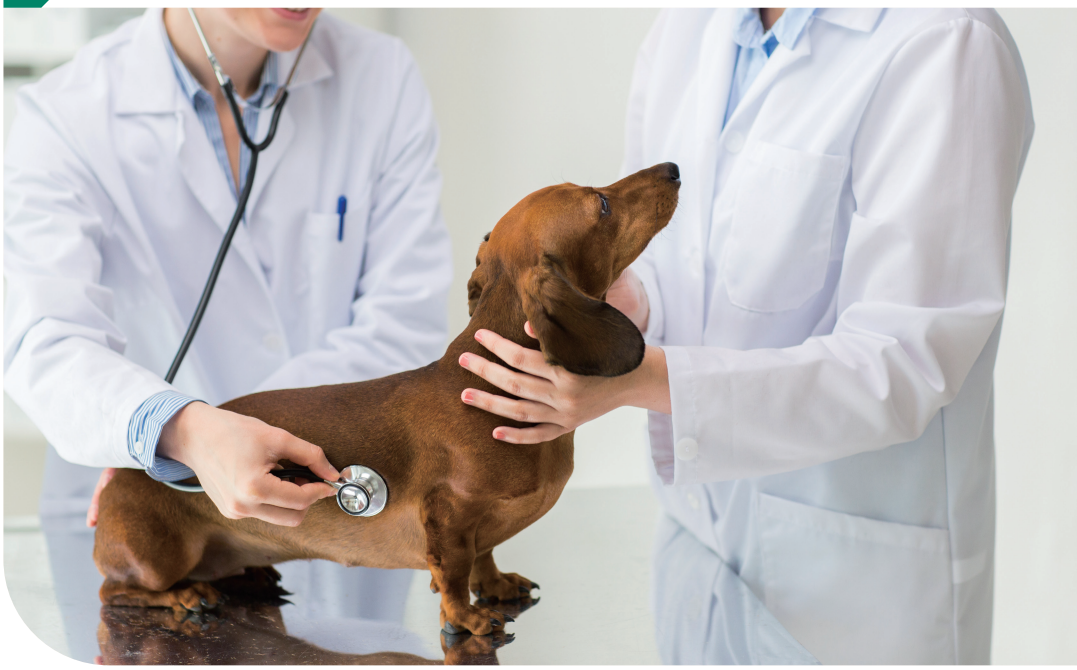
직권등록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이 많아져요

정부는 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LS의 전면적인 시행 이후 재배면적이 좁아 판매량이 적은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 회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과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엽채류와 허브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신규 작물과 병해충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상황 속에서 방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약해·약효·잔류 등의 시험을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면적 재배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적기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은 정부가 직접 등록해드려요"

개선전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개발과 등록 기피로 인한 농약 부족

개선후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은 정부의 직권등록으로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동물진료비 대상을 대폭 늘렸어요

기존에는 가축,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진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인들의 동물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세의 면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개정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을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의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등 보편적인 진료행위와 더불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 부담이 완화되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부담을 줄였어요"

개선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동물 진료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개선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항목을 100여 개로 확대하여 반려동물 양육가구 진료비 부담 완화

전공과 관계없이 의무종사를 미룰 수 있어요

정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로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이 제도에 지원하는 3학년생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은 학기당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학업장려금 2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상 학생에게는 의무종사가 따르게 되는데,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의무종사를 유예받고자 할 때는 기존에는 농식품 관련 분야로 진학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 융복합산업의 성장에 따라 AI, 물류, 블록체인 등 다른 전공 분야도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공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른 전공 분야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의무종사를 미룰 수 있음에 따라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식품 융복합산업분야의 진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창업농민이 늘어나고 농식품 융복합산업이 탄력을 얻게 되었어요"

개선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농식품 관련 분야일 때만 의무종사 유예 가능

개선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의무종사 유예 가능

재정식·재파종에 사용할 종자 및 모종 구입비용을 지원해드려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거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밭작물은 정식 또는 파종 초기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재정식 또는 재파종을 한 경우에는 막상 수확기가 된 시점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식·재파종 특약을 새로 만들어 재정식·재파종에 필요한 종자 또는 모종의 구입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기 자연재해로 손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하반기 밭작물의 판매 일정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됨에 따라, 농가가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밭작물의 특성에 따라 재해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일정을 조정했어요"

개선전 밭작물의 재배 초기 자연재해 피해 확인 불가능

개선후 밭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 마련 및 가입일정 조정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귀농창업자금 회수 기준을 완화했어요

정부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돕기 위해 귀농창업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75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귀농인이 사업의 일부라도 목적 외에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귀농인이 계속해서 영농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어도, 영농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만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수로 인한 농촌이탈을 방지하고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유지해서 농촌 정착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목적 외 사용한 금액만 돌려주고 영농 이어갈 수 있어요"

개선전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귀농창업자금 전액 회수

개선후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해당 금액만 회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 한도를 높였어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재건축 대상의 주택이 많아지고, 후계농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남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대출 한도가 건설자재비와 물가가 오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인상분과 변화를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신축은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대수선은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3~5년마다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한도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신축 또는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가가 올라간 만큼 더 지원해드려요"

개선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 한도

개선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 한도 상향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의 기준규모를 낮췄어요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는 도시농업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텃밭을 도시농업공동체에 등록하려면 다섯 가구 이상이 참여하여 최소 100㎡ 면적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대도시 희망자들이 운영 규모를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텃밭의 규모가 50㎡ 이상만 되어도 도시농업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농업 공동체의 활성화를 돕는 것은 물론 도시와 농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험 영농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0㎡ 면적의 텃밭만 있어도 농작물을 가꿀 수 있어요"

개선전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의 기준 면적을 100㎡ 이상으로 제한

개선후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의 기준 면적을 50㎡ 이상으로 완화

육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렸어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앞으로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을 갖추면 최대 3억 원의 육성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종 분야는 육성자금을 농지와 시설, 그리고 '기타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자금'에는 농기계, 묘목, 또는 종자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자금 용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타자금' 용도에 비료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성자금으로 비료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개선전 육성자금 사용 분야를 농지와 시설 외 기타 일부로 제한

개선후 육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타자금' 분야에 비료 추가

현장중심의
농식품 규제혁신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2023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20선

발 행 처	농림축산식품부
발 행 일	2023년 11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홈 페 이 지	www.mafra.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픽업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